

# 이슈 리포트

19

2003년 11월 세째주(11/17 ~ 22)

## ◎ 주요내용

- 세상돋보기:	불법정치자금문제
- 노동자 세상:	손배.가압류금지법안
- 통신정책:	MVNO?
- 정자동 6층에서:	사외이사의 필요성...
- 만화방	시사 만화



KT노동조합 정책기획실

# ☞ 세상돈보기

||

||

☞ 한국에서 가장 불신받는 집단으로 정치인과 기업인을 꼽는다. 그런데 이런 불신집단들 사이에서 검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한국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100억을 주었다는 기업이 나오고, 대부분의 한국 재벌기업들은 최소한 수십억 들을 준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이야기가 있다. 이런 불법 검은 돈을 꿀꺽 해먹는 놈들도 있다고 한다.

정치자금문제는 과연 팔수록 드럽기 그지없다.

정치는 사회의 경제, 문화, 제도 등 모든 것의 꽃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정치는 도대체 무슨 꽃인가?

정치자금을 통해 많은 분들이 사회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불신만을 키워가는 것이 안타깝다. 오마이뉴스의 칼럼중 정치자금에 대한 건강한 문제인식을 소개한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를 기업으로 확대하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니만큼 제 구실을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원칙적으로 민주사회에서 모든 개인들은 자기이익을 높이기 위해 단체를 조직할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어떤 이익단체도 그 활동하는 방식에서 제멋대로일 수는 없다.

## 재계의 돈은 군부의 무력과 같다

전경련이 이익단체로서 활동하기 위해 돈을 수단화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군부가 자기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아니 부자집단이 돈으로 매수하는 부패는 군부가 무력을 쓰는 쿠데타 보다 더 빨리 사회를 몰락하게 한다.

부자들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그들의 힘인 돈을 이용하는 것이 금권정치다. 금권 정치는 사회, 문화, 교육에 영향을 주고 종국엔 국민의식까지 지배하게 된다. 바로 황금만능주의라는 타락상이다.

요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전경련의 입장은 새삼 우리나라 부패의 역사를 생각하게 한다.

그들의 "억지로 돈을 갖다 바친 것도 억울한데 처벌까지 받게 됐다"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따져 봐야 할 때다.

더구나 전경련은 앞으로 정당을 지정해서 정치자금을 내겠다고 했다.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파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치 게임에서 돈은 실탄이라 불린다. 정치개혁이 제대로 단행되면 돈관 선거는 사라질지 모른다. 그러나 자금력이 풍부한 정파가 정치를 주무르는 현상은 어느 나라나 똑같다.

돈과 정치에서 나라별로 차이가 난다면 자금 제공자의 윤리관이다. 비뚤어진 사회윤리를 가진 기업주가 돈으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우리의 경우 정치자금을 대는 기업의 윤리가 어떤가.

### **소규모 관준민비형에서 대규모 기업형 부패로**

한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에 비해 기업윤리와 국민의식이 발전하지 못했다. 돈 많은 기업인에서부터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인, 인허가권을 가진 관료 등의 의식이 경제성장과 함께 합리적으로 높아지지 못했다.

경제성장 제일주의만 관철지 그것과 균형을 이루어야 할 도덕과 윤리, 정신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뒷전이였다. 정규교육을 맡은 학교도 그랬고 시민사회를 지배한 언론도 책임이 컸다. 졸부 경제가 정치를 타락시키고 시민사회를 오염시키는데도 그 정화장치는 없었다.

서구사회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물질적 쾌락과 무절제, 부패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기둥 노릇을 한 것은 청교도정신이었다. 종교개혁 이후 형성된 프로테스탄티즘이야말로 부의 축적에 따른 사회윤리를 강조하는 서구 자본주의의 정화장치였다. 독일의 사회사상가 막스 베버가 갈파한 내용이다.

우리의 기업가정신과 사회윤리는 그것에 비하면 너무도 동떨어진 모습이다. 개발독재 아래서 성장한 기업이 제대로 사회윤리와 경제민주주의를 알지 못한 채 돈 벌이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개발독재에 의한 경제성장 이전에는 뇌물도 소규모였다. 힘을 가진 정치인이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윤회유나 급행료를 쥐어주는 정도였다. '관준민비형 부패'의 전형이었다.

그것은 독재체제 아래서 민주화가 억압됐기 때문에 정치인과 관료 같은 힘을 가진 계층이

일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회문화 속에서 고질화된 부패였다. 거기서는 돈을 주는 자 보다는 힘 있는 계층의 전근대적 행태가 주범이다.

그러다 개발독재와 함께 부패도 훨씬 대규모로 바뀌었다. 경제개발기에 가장 흔한 부패는 해외에서 들여 온 차관을 배정받기 위해 기업들이 벌인 비자금 로비였다. 검은 돈이 커야 그것에 비례해서 정권이 주는 특혜도 컸다.

해외 차관은 일반 은행 빚보다 훨씬 싼 이자로 장기간 쓸 수가 있어서 엄청난 금융특혜였다. 국민부담을 담보로 들여 온 외국차관의 배분권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전형적인 개발독재 체제의 모습이다.

그런 특혜를 얻기 위해 기업의 비자금 로비가 시작된 것이다. 나는 그것을 '기업형 부패'라 부른다.

#### **탈법적 2세세습과 분식 회계의 기업윤리 바로잡아야**

그동안 재벌이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행사한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런 부패행위가 얼마나 광범하게 퍼졌을 것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IMF관리사태 속에서 잇달아 파산하거나 부도위기에 시달리면서 국가경제까지 공멸의 길로 몰아갔던 기업들은 대부분 그렇게 정권에 로비자금을 주고 성장한 특혜재벌들이다.

최근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기업은 "표적 사정이 두려워서 돈을 주었다"고 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약점이 많은 기업일수록 선거 때 정치권에 내는 보험료도 크기 마련이다.

탈법적인 2세 경영세습이나 금지된 내부거래, 분식회계 등을 일삼지 않는다면 사정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 특혜를 받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면 기업이 무엇하러 정치권력과 가까이 하려 하겠는가.

권력을 가진 자가 금품을 받는 것 못지않게 로비자금을 제공하는 기업인도 부패에 책임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선거자금 수수가 관행화한 것은 사실상 경제개발기의 비윤리적 기업들에 의해서다.

검은 돈을 불법적으로 공여한 비윤리적 기업들이 그것을 받는 정치인과 동등하게 처벌받지 않는 한 부패 근절은 이룩될 수 없을 것이다 (김재홍 논설주간)

## · 가 ,

두산중공업 노동자 고 배달호씨의 분신을 계기로 민노당과 민주노총, 민변 3개 단체는 올초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법률개정안을 만들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불법파업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노사관계법을 고치고, 불법파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용자의 손배·가압류의 인정 범위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만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신계륜 의원을 통해 입법청원은 됐으나, 환노위 청원심사소위에 방치된 상태다. 박창규 민주노동당 정책부장은 "1명의 입법청원 의원도 간신히 구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 발의는 불가능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 노동현안 손놓고 있는 국회 환노위

신계륜 의원실의 관계자는 "노동계의 개정안을 소개한 이후 진행상황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후 환노위 소속 박인상 의원이 지난 3월 사용자와 노동계가 모두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용자측으로 참여한 경총과 노동계 모두 반발하면서 추진력을 잃었다.

박인상 의원실의 정현민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이 노동계의 기대감을 높인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도 법안을 내놓고 나서 노동계의 욕을 먹을 것 같아 추진을 안했지만 최근 잇단 노동자 분신을 보고 그 때 어떤 식으로든 법안을 발의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후회가 든다"고 밝혔다.

환노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 안을 내놓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특히 노사정위의 논의사항을 통해 정부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법률안을 처리하는 관행이 자리잡은 상황에서 환노위가 노동관련 법안을 주도하기 어렵다"는 속내를 털어냈다.

그러나 노동관련 현안에 대한 환노위의 주도권 상실을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자질과 사용자 편향성에서 찾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박강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역대 환노위 소속 의원들 중에서 지금 구성이 최악이며, 손배·가압류 문제를 대하는 소속 의원들의 태도는 노동을 다루는 의원들이 아니라 사용자를 대변하는 재경위 소속 의원들인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 환노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16명의 의원 중 노동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중략)

### **손배·가압류 남용에 대한 근본 대책이 최저생계비 보장?**

현재 손배·가압류 관련 법률 개정안 중 정식 발의된 안으로는 환노위 소속 오세훈 의원이 주도해서 발의돼 지난 5월말 법사위에 계류된 민법개정안이 유일하다.

이 안은 급여 가압류의 범위를 급여채권의 2분의 1로 제한한 현행 민사집행법 규정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바꾸고, 신원보증법을 개정해 노동자의 연대보증인까지 미치는 사용자의 손배·가압류의 인적 범위를 제한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제시한 '최저임금 보장 수준에서 가압류 제한'과 비슷한 수준의 대책을 담고 있는 이 안에 대해 노동계는 아예 외면하는 실정이다.

박강우 정책국장은 "지금 최저임금이 약 56만 원 수준인데, 이 수준의 2배 이상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실효성을 갖지 못할뿐더러, 임금이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인 노동자는 오히려 가압류 인정범위를 더 확대시키는 기막힌 안이 정부안"이라고 꼬집었다.

박 정책국장은 "일본의 경우 사용자가 가압류할 수 있는 급여의 수준을 25%로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임금이 낮은 노동자에게 생존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로 급여에 대해서는 특정금액 이상으로는 가압류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박인상 의원실의 정현민 비서관은 "정부가 내놓은 안은 손배·가압류 대상 노동자의 생계보장 대책이지, 사용자의 손배·가압류의 남용을 막는 대책은 전혀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이런 개정안마저도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발의한 민법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법사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보수적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와 노사정위 등 다른 관련기관도 사실상 대통령만 쳐다보면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위에 여러 특위가 구성돼 있지만 손배·가압류 관련 특위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사정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계가 정부를 상대로 손배·가압류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역시 마찬가지다. 손배·가압류 문제를 다루는 노동부 노동조합과의 한 관계자는 "손배·가압류 법률 개정안은 우리 부서에서 논의된 바 없으며, 법무부와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처럼 노동부, 국회 환노위, 노사정위 등 관련기관의 대책은 화염병까지 등장할 정도로 절망과 분노에 이른 노동계의 절규에 비쳐 너무나 안이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정부가 제시하는 안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민변과 노동계가 합의해서 마련한 개정안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 국회를 통해 입법화하는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 취하도 노동계가 정부의 의지를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 기사는 사이버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http://www.peoplepower21.org)에 실린 기사입니다)



## MVNO ?

☞ 지난 6일 홍콩에서 진대제 장관이 진행중인 유무선서비스의 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 “경쟁 활성화를 위해 LM시장 개방(유선) 및 MVNO 도입(무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KT입장에서 LM시장 개방은 큰 손실이지만 반대급부로 MVNO 시장 진출은 그 손실을 만회할 수도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저히 문자만으로는 추측도할 수 없는 MVNO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 1. 개념과 배경

가상이동망 사업자라는 이름으로 번역할 수 있는 MVNO는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머리글자로서, 필수적인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망 사업자의 망을 임대하여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MVNO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유선과 달리 이동통신은 한정되어 있는 주파수를 이용해야 하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업자의 수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라는 자극이 필요한데, 이를 이해 기존의 이동통신망을 임대하여 사업에 진출토록하는 것이다.

### 2. MVNO의 효과

첫째,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이다. 대부분 주파수의 한계로 한국가의 이동통신사업자는 2~4개정도인데 MVNO가 도입된다면 더 많은 사업자가 경쟁을 하게됨은 분명하다.

둘째, 유무선 통합을 촉진한다. 유무선의 통합의 형태는 한 사업자가 유선과 무선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것인데, 주파수의 제한을 MVNO는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무선인터넷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기존 유선 컨테츠 및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는 MVNO를 통해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활성화가 될 것이다.

### 3. KT에 미치는 효과

그동안 유선시장은 시내전화부문을 제외하면, 시외.국제.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환경이 조성돼 있고 무선사업자도 별정 통신 역무를 통해 유선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반면 무선시장은 진입자체가 불가능 하는 등 불공정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더군다나 2003년 매출 및 영업 실적을 보면 KT의 매출은 줄거나 소폭 증가하고 시장 지배력도 소폭이나마 줄어들고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올해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 특히 SKT의 매출 및 순이익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기에, KT로서는 유무선 시장에서의 규제정책 변화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만약 MVNO가 도입된다는 것은 KT가 자체적으로 무선사업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유선 고객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무선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무선 통합 상품 개발을 통해 유선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가

### - 기업의 정치자금문제 해결 방안

식욕 문제로 다이어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방법이 있다. 식사 전에 TV 뉴스를 보는 것이다. 연일 각 정당의 수백억원 불법 정치자금 문제와 경영단체의 황당무개한 소리를 들으면 정말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도리어 어제 먹은 것조차 올라올 판이 아닌가.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정치자금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또 이번에도 얼마간 언론에서 떠들다가 서로 구린 정치인들끼리 협잡하고 스리슬쩍 넘어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그렇다면 정치자금 문제를 풀 수 있는 고리는 없는 것일까?

먼저 정치자금이라는 것이 어떤 돈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 생각해보자.

그 돈은 결코 기업 소유주 개인의 돈이 아니다. 그 돈은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남은 돈이거나, 복지제도를 축소하여 모아놓은 돈, 혹은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노동자들을 퇴직시키고 남은 인건비들은 아닌가?

그리고 그 돈들은 대체로 분식 회계 등 투명하지 못한 재정운영 방식으로 부당하게 모아진 돈일 것이다.

뿐만 아니다. 이런 거액들은 대체로 최고급 경영진 회의 등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흔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종종 경영진들이나 이사들의 대부분은 기업 소유주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기에 감히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암묵적 공범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기업 소유주(최고 경영자) 마음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잘못된 구조에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이런 불법자금이 형성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관행은 결코 바뀔 수 없다는 것이다. 언제든지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정치자금을 만들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모 기업인은 보복이 두려워 불법정치자금을 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실제로 정치꾼들은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리 정치꾼들이 협박을 해도, 줄래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문제의 근본해결이 된다는 것이다.

그 근본 해결 방법으로 분식회계에 대한 엄한 처벌, 재정 투명성 확보 등의 방식이 제기된다. 하지만 그런 제제수단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일정 개선의 효과는 있었는지 몰라도 최근에도 정치자금문제가 계속 되는 것을 보면 근본적인 해결방식이 아닌 것 같다.

방법으로는 기업을 가장 사랑하고 동시에 기업주의 부정한 지시나 제안에 당당히 맞서 거부할 수 있는 세력을 통해 기업주를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연 그런 세력이 있을까?

바로 노동조합이다.

자신의 일에 대한 긍지와 회사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이다. 아마 회사사랑마음은 고위급 경영진보다 결코 뒤지지 않으며, 사장보다 적다고 하면 서러워할 사람들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사랑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회사를 나가라 하면 당장 생활자체가 갑갑해지기 때문에 회사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운명을 모두 합쳐놓은 사람들 아닌가?

이런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는 약하지만 서로 의기가 투합되어 있는 노동조합으로 모아졌을 때는 더욱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된 기업이 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기업주(최고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과 지시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노동조합이고,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가하게 된다면 불법의 초기부터 그 싹을 째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기업주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기를 쓰고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주들의 이런 잘못된 의식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전혀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국의 기업주들, 특히 재벌들은 기업을 마치 자신들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다. 과거 구명가게시절부터 창업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작을 하였고, 독재체제 아래에서 정치관료에게 뇌물을 주어서 각종 특혜를 받아 성장하고, 그 기업을 탈법적으로 2세에게 물려준 한국의 천박한 자본주의 역사가 기업주들에게 기업을 자신의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하였다.

지금의 기업은 주주와 소비자와 노동자의 것이다.

이제 노동자들의 제몫과 역할을 찾아서, 기업주의 일방에 의해 불법과 탈법이 저질러지는 것을 내부에서 막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무슨 공산주의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동안의 잘못된 부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유효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최근 노동조합 운동도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다.

그 변화의 모습은 기업주를 대상으로 반대하고 뿔 달라고 투쟁만하는 모습에서 이제 기업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식들이다.

이런 건강한 의식과 모습이 이제 기업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면 언론에서 그렇게 문제 시 하는 노사갈등도 상당히 해결될 수 있으며, 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 불법 정치자금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는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경영협의회등을 통해 회사 전반에 관한 구체적 협의와 공동 결정, 공동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외이사 추천은 노동조합의 입장을 관철하고 힘을 키우겠다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내부를 투명케하고, 올바른 회사 발전에 소금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충정인 것이다.♪

화

방

